

여야 이번주 원구성 협상 닷 올리나

민주당 “더이상 못미뤄”...한국당·바른미래당도 협상 시사 국회의장단·상임위 배분 전략 부심...사게특위 연장도 관심

여야가 조만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6·13 지방선거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과제에 산적한 만큼 더는 원 구성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참패의 후폭풍으로 내용 양상에 접어든 자유한국당도 일단은 “이번 주부터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도 2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협상 창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주 중 원 구성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당

의 내부 상황은 원 구성 협상 개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 협상 개시 방침을 밝혔지만, 당내 갈등이 심화된다면 협상장에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원내 1당(130석)이자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 사수는 물론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으로부터 되찾아와야 한다는 내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아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이다.

또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위원장과 외통 위원장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맡은 기획재정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12석의 한국당은 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호락호락하게 내줄 수 없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장 2명 가운데 1명은 물론, 의석수에 따라 2곳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보수 야당이 국회의장 2명을 모두 가져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의장 자리를 지렛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석 더 확보, 농해수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는 전략이

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석 분포상 평화와 정의의 모임에 특위 위원장 자리가 배정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승용 의원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으로 갈린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또 민주당은 남북 경협을 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설치를, 한국당은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연장을 각각 추진키로 해 특위 문제를 놓고도 ‘살바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

한국당 갈등 ‘점입가경’

김성태 혁신위 강행에 친박계 반발...초재선모임 연석 회의

지방선거 참패 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조만간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을 강행할 태세인 반면 친박(친박근혜) 진영은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행은 24일 “오늘 오후나 내일 혁신 비대위원장을 도시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되고, 외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친박계는 김 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전히 맞서고 있다. 친박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당내 초·재선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김 대행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리겠다고 버리고 있어, 이날 모임 이후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도 있다.

한 재선의원은 “내일 초·재선의원 모임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김 대행 등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강

하게 반발하는 것은 김 대행 등 복당파 의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한 뒤 친박계 의원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한국당 내에서 초·재선의원(74명) 숫자가 전체 의원(112명)의 66%에 달해, 모임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은 정풍대상자 1차 명단 16명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친박계 최경환·홍문종·김재원·윤상현 의원, 복당파 김부성·김성태·김용태·홍문표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각료 또는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이주영·곽상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 대행이 힘겹게 비대위원장을 선임한다고 해도, 비대위 자체가 당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악의 갈등은 피해 보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일부 친박·비박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수습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



“투투한 지방정부 일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의원,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에서 ‘투투한 지방정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8월 중순 전당대회

김동철·김성식 대표 물망...안철수·유승민·손학규 역할 관심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를 딛고 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를 오는 8월 초중순에 선출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당권주자 후보군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가운데, 합당 주역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공동대표, 그리고 지방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치권에 컴백한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론이 차츰 부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새 지도부 구성을 마치기 위해 휴일인 8월 11일 또는 8월 18~19일 중 하루를 정해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에 나서기로 했다. 날짜는 25일 확정된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24일 “지역위원장이 6월 13일부터 임기가 끝나 공식이므로 전당대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차기 지도부 선출대회’라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국민의당 출신 중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식 의원이 거론된다. 또 바른정당 출신 중에는 하태경 최고위원

의 이름이 나온다.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차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안 전 의원과 유 전 공동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다. 또 정치 경륜이 있고 합리적 이미지를 가진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등판’해 중도개혁 세력으로서 정치권에서 바른미래당의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가 25일 국회에서 김관영·이연주 의원의 2파전으로 열린다. 지난 23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김관영·이연주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고, 추첨 결과 김 의원이 기호 1번을, 이 의원이 기호 2번을 각각 받았다.

앞서 김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당의 화합을 이루고 젊고 강한 실력 있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기동력 있는 원내 운영을 위해 기개와 결기는 장수가 되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전해철 “민주당, 새로운 길 가야”

여당 과제 제시 당권 도전 시사...대의원준비위 내일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24일 문재인 정부 2년 차 여당 리더십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목표 출신의 전 의원은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표명, 사실상 당권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은 새로운 길을 가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에는 민주당의 역할과 실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강력한 당정협력 ▲당 혁신 실천 ▲대국민 및 대야 소통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거 것-오프를 포함해 경선규칙 및 지도부 교체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내에 이해찬, 김진표, 최재성, 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잠재 당권 주자군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인영, 이종걸, 안민석, 설총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진영 잠재 주자들 도 당내 역학구도에 따라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개혁노선”...유성엽 “총선대비”

평화당 활로 모색 토론회...당권주자 해법 제시

6·13 지방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민주평화당의 활로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한 당권주자들의 해법은 달랐다.

지난 22일 당의 활로 모색을 위한 ‘민주평화당,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당권주자인 정동영·유성엽 의원이 패널로 참여, 당의 진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오는 8월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간 토론회를 연상케 했다.

정 의원은 이른바 ‘정동영 개혁노선’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쓰나미에 따른 정치세력은 쓸려나갔지만, 평화당은 나무뿌리에 걸려

숨을 쉬고 있는 국면”이라며 “이제 야전 텐트에서 벗어나 집을 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당의 5대 가치인 민주·평화·개혁·민생·평등을 실천하는 것에 답이 있다”며 “야당은 리더십이 90%인 만큼 정동영 개혁노선을 가지고 가야 당이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는 처참한 패배로 죽었다”며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한 뒤 “(민주당과) 통합에 기대어 살아보겠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당의 활로로 ‘조기 총선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